

북한의 대미 대결정책과 「핵실험」 *

고 성 준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국문요약〉

지난 10월 9일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 하에 기존의 안보균형 질서를 일거에 허물어 버렸다. 그 동안의 핵과 관련하여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기는 이번이 3차다. 그 동안의 위기가 미국에 의한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동북아에 있어 중국에 이어 북한이라는 「핵국가」의 등장이 가져오는 폭풍이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북협력정책을 기조로 담고 있는 한국까지 기세한 국제사회는 6.25 이후 「북핵폐기」를 목표로 가장 큰 제재를 하려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핵」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와 「경제」의 해결을 핵키드로 원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선 「핵포기」의 문제 가지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절충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북한은 강경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외면, 제재 속에 처할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될지 모른다.

주제어 : 북한의 핵실험, 3차 북핵 위기, 유엔인보리, 대북제재, 「핵 국가」, 6자회담, 한반도평화의 전망

I. 들어가는 말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 실시 방침을 전격 공표한 후 불과 엿새 뒤인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안보균형 구도를 허물어 버렸다. 북핵위기와 관련 제3차가 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문제는 2006년 10월 9일 「이전」과 「이후」는 절적

힘으로 크게 혼들리게 되었다.

94년의 1차 「북핵 위기」 와 2002년의 2차 「북핵 위기」 와 2006년 제3차 「북핵 위기」 가 그 성격에 있어 다른 것은 1차와 2차 위기가 핵개발과 그 저지에 초점이 있다면, 3차 「북핵 위기」 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핵 보유」 국가로 등장하는데 따른 위기이기 때문이다.¹⁾ 북핵실험 이후 UN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난 결의」 에서 안보리 현장 7조에 의거한 「제재 결의」 를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6.25 남침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압력으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²⁾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마저 북한에 강한 불만과 그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역시 유엔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 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대북지원을 유보하는 등 그 후유증은 북한 외교와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10월 9일의 「핵실험」 이 가져 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배경 그리고 목표는 무엇일까?

* 이 논문은 제주평화통일포럼과 한국북방학회가 공동주최한 「북핵 6자회담의 전개와 남북관계전망」 국제학술회의(2006.10.27)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제1차 북핵위기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1993.3.12)으로 고조되었으며,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제네바합의를 체결(1994.10.21)함으로써 일단 해결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다. 제2차 북핵위기는 미국이 캘리 국무차관보를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2002.10.3-5) 북·미 대화가 열렸는데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KEDO의 대북중유공급이 중단(2002.12)되었고 북한은 NPT탈퇴(2003.1.10)와 5MW원자로 재가동(2003.3.26)등으로 맞서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 2) 전성훈, 「북한의 원자력 정책·'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기만과 집요함으로 이룬 "그들만의 핵의지력", 장인순 외, 「한국의 핵주권」, 송년특별부록 「신동

II. 북한의 대미대결정책의 형성

1. 북한의 대미적대인식의 특징

가. 분단과 통일의 장애국가인 「미국」

북한은 미국을 구한말 조선을 노린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 분단의 원인을 미국의 「남조선」 강점에서 찾고 있고, 통일은 미국의 방해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9세기 40년대부터 조선침략을 꿈꾸어 온 미국놈들은 1866년에 해적 선 <<샤만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략의 첫걸음을 들여놓았다. 이때 불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흉악한 침략자로 등장하였다. 미제는 1950년에 조선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100 여 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이다.”³⁾

또한 북한은 50년의 한국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으며 그 전쟁 기간 중 북한인민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됐음을 대미적대감고취를 위한 선전선동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 예로 한국전쟁시 미군에 의해 ‘신천대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 황해남도 신천군에 기여는 미제승냥이놈들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대학살만행사건으로 인해, 50여 일 동안 군내 전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 명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⁴⁾

나. 신년사에 나타난 대미인식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을 공산통일을 반대하는 최대의 적대국으로 보고 김일성 생존시 김일성의 육성으로 매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를

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3)p413. 김영수, “북한의 대미인식: 내용과 특성” 민주평통제주시협의회 주최 특강(2005.5.10) 참고자료, p2 재引用

통해서 내외정책의 반미노선을 더욱 강화시켜왔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는 ‘미군’, ‘미군정’, ‘미제국주의자’라는 표현 이외에는 별다른 적대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49년부터 ‘놈들’, ‘떠벌리고 있다’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⁵⁾

전시와 전쟁 직후의 신년사에는 ‘미제강도놈들’,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 ‘미제무력침공자들’, ‘미제고용병들’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을 치른 당사자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였다. 1961년은 특이하게 ‘미제’란 단어와 함께 보다 중립적인 ‘미국’이란 표현이 같이 쓰이고 1962년부터는 다시 ‘미제국주의자들’이란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서 미·중 접근을 비롯하여 동북아의 새 질서에 따라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보면서도 외교상 대미 접근의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표현은 「미국」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기도 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적대적 대상이었다.

다. 북한의 對美 데땅뜨와 좌절

북한에게 미국이 최대 적대 국가이나, 70년대 들어서서 미-중공 간의 화해, 미-소 간의 평화공존 등 냉전 질서의 변화 등 냉전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72년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1972년부터 미국 의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티토와 주은래 등 공산국가의 지도자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하며 노력하였다

처음으로 1972년부터 미국의 언론인과 학자를 북한에 초청하였다. 1974년에는 한국전쟁의 휴전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제의하게 된다.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통일의 장애요소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하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하고자 했다.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정권의 승인을 유도하여 북한은 남북한관

계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한반도문제의 내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접촉체의에 먼저 남한과 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이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남북한회담을 통하여 화해와 공존에 합의하면 북한의 접촉체의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를 수용하여 무조건 「대미직접협상」 고수에서 물러나 미국과의 협상 방식에서도 남한을 배석시킨다거나 하는 입장의 변화와 함께 「총리회담」을 통해 남한과의 접촉을 받아들였다.⁶⁾ 그러나 남한과의 회담은 전전이 없었고 대북접근은 미국의 무시로 좌절되고 말았다.

III. 북한의 핵개발정책의 추진과 협상카드로서의 「핵」

1. 배경

한국전쟁을 먼저 시작한 북한에게는 미국의 개입에 의해 패배한 전쟁이며, 그 결과 체제의 생존위협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전쟁 시 맥아더에 의해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겪었던 북한은 정글에서 호랑이와 사자 등 맹수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기는 고슴도치식 안보전략을 택하고 그 수단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심을 한국전쟁 이후 가지게 되었다.

2. 원자력 연구소의 설치에서 원자로 건설

북한이 언제부터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일제 지배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북한의 우라늄광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니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라늄의 효용성을 알게 되었고 400만톤이 넘는 매장량으로 원자력을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이미 전쟁이전인 49년에 원산에 있는 소련문화원에서 원자력의 기초지식에 관

6) 이상우, "북·미 접근의 새 양상", 이상우저 「한국의 안보환경」 2집, 서강대학교출
판본 1994. -449~450

한 강좌가 개설되었다.⁷⁾ 북한이 핵개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2년 12월 조선과학원 창설에서 비롯되었고, 1955년 7월 김일성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하여 핵물리 연구사업과 과학자 양성을 강조하면서 추진되었다.⁸⁾ 1956년 3월 북한은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 이후 북한원자력 학자들이 소련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59년 9월에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을 체결했으며 1964년 4월 영변에 원자력 연구단지가 들어섰고 65년 6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연구용 원자로 1기를 도입하여 영변의 연구단지에 세웠다. 소련은 이 원자로에 필요한 농축도 10%의 핵연료를 73년까지 제공했다.

1974년 1월 북한은 '원자력 법'을 제정했으며, 북한의 과학자들은 IRT-2000 원자로를 개량해서 농축도 8%의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자력 연구를 확대해 나갔다.

1986년 12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 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5MW급 제 2 원자로와 시험용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하게 된다.⁹⁾ 1986년 영변 원자력 단지 내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수차례의 고품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파키스탄 정부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대표적 핵과학자인 AQ 칸박사를 86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초청하여 우라늄농출 기술을 위한 미원심분리기 기술을 지원받는다.¹⁰⁾

3.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열세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변혁 에 따른 「핵무기 개발」 정책의 추진

7) 전성훈, 전개서 p103

8) 가을에 북한과학원을 핵물리학 관련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과학자들이 동유럽에서 열린 원자력평화이용국제회의에 참가했다. 안찬일 외, 「10명의 북한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후의 북한」, 인간사랑, 2006. pp176-177,

9) 북한이 5MW의 원자로의 설계에 착수한 것은 1980년 7월이며, 87년에 가동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프랑스가 개발한 GI형 원자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를 선택한 이유는 북한에 있는 천연 우라늄광산을 이용하기에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플루토늄 생산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 성훈, 상계글, p104

10) 「뉴스위크」 NO.752호, 2006.10.9

북한은 휴전 이후 체제역량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가 7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방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경쟁에 뒤질 것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게 된다.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 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일어난 동구권의 변혁은 체제유지와 남한혁명의 추진을 명분으로 권력승계를 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동독은 그 동안 북한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하나였는데 체제 유지의 실패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내부의 존속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케 하였다. 소련의 붕괴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 보다는 미국의 대소압박정책이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을 수단을 강구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위의 과제를 안게 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직면하여 핵문제를 협상카드화 하였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핵카드」를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등을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4. 미국과의 협상카드로서의 「핵」

북한은 탈냉전 절서 속에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분야에서 화해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체제수호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북한이 이를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이른바 「핵 문제」이다. 북한은 「핵 개발 카드」를 내세워 북핵 문제를 국제쟁점화 시켜 이를 통해 70년대부터 추구했으나 이루지 못한 미국과의 대화를 가지게 되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협상은 '북한의 과거 핵 및 현재 핵 활동 동결'과 '미국 및 서방의 보상'을 내용으로 한 제네바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냉전 기조의 북미관계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 않음으로써 적대적 관계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빠져 있는 북한이 체제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아래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버는 등 진정한 화해의 길을 걷지 않았다. 1998년 8월 북한 금창리 지역의 지하핵 의혹시설 발견과 증거리 단단히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또 다시 북한 핵문제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상시켰다. 2000년 7월 북한의 아세안지역포럼(ARF)가입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은 외무장관회담을 열고,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국과 북한을 상호방문 하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 빠른 진전을 보였으나,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개선조짐의 북미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된다.

IV. 북한 「핵국가」로의 진입

1.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노선

미국 공화당 소속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 한 후 「제네바 합의」를 백지화하고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의 수단으로 외교적 노력 보다는 군사적 압박 정책을 채택했고 이에 북한은 강경반발하면서 대립하게 된다.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불량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교체 노선으로 선회한다.¹¹⁾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권교체노선'은 북한에게는 '체제전복'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게 되고 핵정책의 목표를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11) 고유환, "북한의 핵 체계와 북미관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제4집, 제4호, 2007.

2. 선군정치와 핵무장

북한에게 탈 냉전기에 있어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 적국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대결 위협이라는 구도 하에서 고슴도치식 안보전력으로 미국에 맞서는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국력을 경주해 온 것도 이러한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에게 정권과 체제를 수호하는 힘은 곧 군사력이며, 군사력이 대내정치 및 외교의 수단이 되어 왔다. 또한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경제난에서 비롯되는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주민단결의 구심점으로, 외부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지원을 유도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의 군사부문은 핵무기 소유임을 「선군정치」에서 강조해 왔다. 김정일의 “나라가 작아도 총대가 강하면 강성대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핵무기 보유를 뜻하며 이를 갖춤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항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¹²⁾

그렇다면 북한 핵의 보유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 CIA가 2002년 11월 19일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이전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핵무기를 1-2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는 것이다.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북한은 중단했으나 핵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90년 중반이후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이 최근 건설중인 원자로가 완전히 작동될 경우, 10년 이내에 매년 두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이를 토대로 각국이 북한 핵무기보유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93년 후반 2-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

12)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6. p115

13) 백수준, “북핵 위기의 경로점망과 대비”, 2006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

고 있다. 일본은 3-5개의 핵무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총체적으로 5-1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⁴⁾

3. 「6자회담」의 수용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변 당사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접어두고 수용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한 것은 당사국 중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부정적인 중국, 한국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6자회담이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2005년 2월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된다.¹⁵⁾ 이어 북한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을 군축회담이 되야 함을 주장했고, 5MW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추출을 완료했다.

4. '9.19 공동성명'의 표류와 미사일 실험발사 그리고 핵실험

중국과 한국 등의 중재로 4차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개최(2000.7.26) 되었고 곧이어 2단계 4차 6자회담(9.13-19)에서 아래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 평화적 방법을 통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조치에 복귀(북핵포기)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

14) 상계글, p4

15)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3차례(1차:2003.8.27-29, 2차:2004.2.25-28, 3차:2004.6.23-26)에 걸친 회담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폐기, 선(先)보상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미국의 선(先)대북적대정책 포기, 핵동결에 대한 보상'을 주장해서 해결점을 못 찾았다.

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주권 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평양선언」에 입각,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추진(관계개선)

-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의 경제협력 양자 및 다자적 증진(경제지원)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관련 당사국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협상 추진 등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야 핵폐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 재무부는 이미 9.15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 유통 및 돈세탁과 관련하여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BDA) 북한계좌에 대한 동결을 단행했다.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나, 성명의 핵심내용인 북핵포기, 관계개선, 경제지원, 평화체제 구축을 어떤 순서로 행동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깊다. 미국은 선북핵 포기 후 미, 북 관계개선을, 북한은 먼저 관계개선을 하고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효포기」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결단이 없기에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다.¹⁷⁾ 따라서 북한은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광범위한 대북강경 여론을 확대 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한국정부는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당국간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던 쌀, 비료 지원을 중단했으며 미·일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를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169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먼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의 중단과 기존 발사 유예공약의 준수를 요구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미사일과 관련 물자·자재·산제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미사일이나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¹⁸⁾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핵실험 계획을 발표(2006.10.3)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책동' 때문에 핵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10.6)하여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안보리결의 1695호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TNT 0.4-0.8kt 폭발규모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돌이 되는 8일과 노동당 창건 61돌이 되는 10일 사이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보유국 가임을内外에 과시하여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 강화를 피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가가 됨을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이라며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핵실험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연결시키는 환영대회를 열어 정권유지 및 제제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V. 북한의 「핵실험」 계산법

1. 주변국기관

가. 중국 : 혈맹에서 불신의 후원자로

북한에게 중국은 한국 전쟁시 미국의 공세로 붕괴직전의 국가를 구원해준 은인이요, 혁명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경우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시 중국공산당 소속으로 활동을 했기에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나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개혁개방의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중국은 믿고 의지하기에 어려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그 후 「강대중국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과 서방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경제성장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제 4세대 정치지도자로 호금도가 이끄는 현 중국의 지도세력은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장경제를 더 확장 탄탄히 뿌리내리려며 정치적으로도 화해의 정치, 민중참여, 민주정치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치환경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신을 북한으로는 내심 '수정주의'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중국은 신의주특구정책에 대한 반대에다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정권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백두산에 대한 장백산化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내부의 변화, 즉 종래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중국의 발전에 북한은 「부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북한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이 북한에게는 중국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게된다.¹⁹⁾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북한이라는 동맹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실험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은 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²⁰⁾

19) 남성욱, "미사일 발사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2006 제외동포세미나(2006.8)발표논문, pp. 103-5.

20) 중국은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황폐위

나. 남한: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의 대상

북한은 남한의 포용정책에 대해 처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경제난 극복과 대미항쟁을 위한 수단으로 「햇볕정책역이용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국력경쟁에서 뒤진 것을 인정하나, 핵무장을 통해 전략적 수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성과에 집착하는 남한에 「민족공조」를 내세워 대화와 교류권을 쥐고 지원을 유도해왔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유지에 집착하는 남한 정부와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대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해 왔고 남한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남한정부가 「핵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미·일과 같이 전면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¹⁾

핵실험이 남한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서 포용정책의 폐기 보다는 수정, 「핵 국가」인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않고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과 대결하는 것 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대북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²²⁾

다. 일본: 미국의 전초기지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일접근을 시도해왔으나 일본인 납치문제가 붉어지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부착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북한은

나 북한의 봉괴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은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응징조치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0.10) 그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1) 조민, “북한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3호 2006. pp89-92
- 22) 한국정부는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후 살, 비료 등 대북지원을 중단한 것을 풀지 않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동참했다. 또한 그동안 기권을 해오던 유엔의 북한인권개선결의 투표에 찬성을 했다. 다만 미국의 PSI 요구에는 소극적인 참여를 결정, 북한과의 무력충돌은 피하려 하고 있다. 북핵실험 직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나, 최근의

일본을 동북아의 미국의 전초기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국과의 대결 연장선에서 인식하고 있다. 핵실험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외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³⁾

라. 러시아: 새로운 우방?

푸틴의 러시아는 석유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관심을 못 가졌던 동북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여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신동북아정책에 편성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 인식,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도 중국, 한국과 같이 미·일의 강경대응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2. 미국의 군사적 제재의 어려움

북한은 「핵 실험」이 가져올 국제사회의 대응 특히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과 전 국토의 요새화, 주민의 저항력 둘째, 미국의 이라크전의 후유증으로 인한 미국 내 반전 분위기 셋째, 남한 정부의 적극적 반대 넷째, 2008년 북경 올림픽, 2012년 상해 박람회 등을 앞둔 중국의 반대 다섯째, 북한의 보복 군사력이다.²⁵⁾ 따라서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미궁에 빠진 이라전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상태인데 핵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부시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줄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주는데 일조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23) 아베신조 총리의 새 일본정부(9.26)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 대화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북 금융제재 등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후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국신 외. 전계서. p.9

24)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NPT체재 복귀와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하면서 세계식량계획(WFP)사업의 일환으로 1280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전달(10.11)했다.

25) 강원식, “북한의 군사, 안보핵문제를 중심으로”, 이우영 외 「화해, 협력과 평화

그래서 미국민 여론의 힘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3. 「NEO-1994」 해결방식의 유도(미국특사의 방북)

가. 「핵국가」 자축을 통한 결속과 함께 「제3의 고난의 행군」 전개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국가」의 진입을 선군정치의 승리로 내세워 내부결속을 과시하며 경제난을 해쳐나가기 위한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펼칠 것이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0% 내외에 불과하므로 그 동안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온 방식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 될 수록 이러한 긴장국면을 체제강화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²⁶⁾

나. 긴장고조의 「압박가드」로 「추가핵실험」 등의 강경조치 선택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를 강화하는 노선을 굽히지 않을 때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위해 「제2의 핵실험」 「미사일실험발사」 등의 강도 높은 행동을 추가로 보여주거나 국지적 위협을 야기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다. 미국특사 북한방문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

남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특사 방북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것으로 보지 않고 북한은 1994년 1차 북핵위기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풀었듯이 미국의 특사의 방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북한은 최근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 “사회 전 영역에서 군대의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며 연인 「선군」을 강조하고 있다. 「NK chosun. com」

VI. 맷음말

북핵 실험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다시금 구사했는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내고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북핵문제」가 이라크 전쟁 못지않은 중요문제임을 인식케하여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수정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을까?

현단계에서 보면 북한의 계산된 핵실험은 총체적으로 보면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북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대외정책의 1순위로 놓고 있으며, 북핵문제해결은 6자회담과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지금의 해법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에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에 다수당을 점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시행정부에 등을 돌리고 정책전환을 투표로 전달한 셈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라크와의 전쟁 책임을 맡아온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압력과 무시 위주의 공세적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점에서만 보면 북한의 「핵실험」이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대북정책에 있어 일부 변화를 유도한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원하는 양자대화보다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대북제재 신중론의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실험」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표현대로 핵폐기의 시간은 2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주선으로 6자회담이 다시 이루어졌다. 북한은 「2차 핵실험」과 같은 강경조치를 계속 할 경우 죽국, 러시아, 한국까지도 가세한 국제사회의 높은 제재라는 협난한 파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전술차원의 6자회담 복귀에 나선 것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PA)은행의 북한계좌동결해제를 풀어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은 결의 기준이 되는 기본 원칙이어서 가시적인 성과 없이 ‘휴회’

되었다. 특히 북한은 향후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인정, 이와 관련 핵군축 회담 그리고 먼저 미국은 물론 UN의 대북제재의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져, 미국의 양보가 없는 한 회담은 진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 하다.

그러나, 북한에게 2007년은 김일성 생일 95주년, 김정일 생일 65주년, 김정일 체제 15주년, 김정일 당비서취임 10주년 소위 '꺾어지는 해'이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체제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핵 보유국」이라는 성과가 목적일 수 없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내부성장의 동력이 없어 대규모 외부 지원(중국, 러시아, 한국 등)을 얻어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는 김정일체제에 대한内外로부터 본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90년 초부터 걸어온 「핵 장정」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경제회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길에 들어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Abstract>

The antagonistic Policy toward U.S of North Korea and Nuclear Test

Seong-Joon Ko

The North Nuclear Test launched at October 9 destroyed the balance of Security on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r and East Asia. The Third Crisis of North Korea Nuclear is derived from becoming

the Nuclear State of N.K.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China, Russia, South Korea which are favorable to N.K, began to give sanctions to N.K. This is a serious burden to N.K. Tha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since Korean War in 1950.

North Korea have tried to solve its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 with 「Nuclear card」. But U.S has not accepted N.K Method on Nuclear Problem. If U.S and N.K can't compromise how to solve N.K Nuclear problem at six-party talks, N.K will go his own way -the second nuclear test etc- and International Society will give stronger sanctions. Therefore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r will be in more dangerous than before.

Key words: North Korea Nuclear Test, The third North Korea Nuclear Crisis, UN's sanction, Nuclear State, Six-Party Talks, Prospect of Korean Peninsular Peace